

司正 장기화… 교육행정 마비

검·경·감사원 등 '저인망식' 수사… 물품구입 차질 등 부작용 속출

서울발 인사비리로 촉발된 광주·전남교육계에 대한 '저인망식' 사정이 장기화되면서 교육현장이 일어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비리 척결의 지에 따라 경찰·경찰·감사원 등이 사정에 착수했으나 가시적인 사정 성과가 나오지 않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불안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사정기관별로 '일단 뒤지고 보자는 식'의 실적쌓기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교원주권과 교육 업무 마비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경찰과 경찰이 광주시 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 교육청, 학교 등 50여개 교육 기관의 기자재·물품구입·시설공사·방과후 특화사업·학원 인허가·비정규직 채용·체험학습·학교급식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 자료를 쟁겨갔다. 지난달 초에는 시 교육청 A과 직원 모두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검·경의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2009년 청렴도 전국 2위에 오른 시교육청은 되레 '비리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6개 시·군 교육청은 지난달 2007~2009년까지 인사·공사·물품·용역 등의 집행 내역을, 도 교육청은 지역내 초·

중·고교 공사·물품 구입·용역 현황 등을 걸·경에 제출했다.

전남도내 상당수 시·군 교육청도 지역 경찰로부터 공사 및 납품 관련 서류 요구를 비롯한 관련 업무 담당자가 내사를 받기도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 11명은 지난 26일부터 7일 일정으로 전남도교육청과 담양·장성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공사·물품·용역 내역 등 모두 16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광주·전남 교육계에 대해 이전에 광주·전남 교육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광주·전남 교육계에 대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사나 공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비리 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일선 학교들이 학생의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사업 신청을 꺼리는가 하면 학습과 직결된 교육 물품 구입을 차

일피일 미루는 등 교육 행정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교육청도 각종 자료 요청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자로 몰아가는 수사방식 때문에 교원 추락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남의 모 고교 교장은 "괜히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데, 어떤 학교 가 예산 집행이나 예산 요구를 하겠느냐"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교육비리를 잡겠다고 교육현장을 속발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야겠지만,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수사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이들이 교육비리가 뭐냐고 질문할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애인 의료봉사

27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서 북구보건소, 현대병원, 우암한방병원 관계자들이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을 '온빛보건의 날'로 정해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발 살아 돌아오길" 애탠하는 박행수 대원 가족들

히말리아 원정 도중 실종

함평 고향집 간절한 기도

27일 오후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의 한 단독주택, 히말리아 원정 도중 지난 24일 실종된 박행수(27·광주대신약회 OB) 대원의 고향집에선 가족들이 모여 무사귀환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박 대원의 부모는 전날에야 실종 소식을 접한 뒤 뜬눈으로 밤을 새며 아들의 귀환을 빌었다. 광주에서 달려온 박 대원의 큰아버지 내외와 고모 등도 부모들 옆에서 박 대원의 생환 소식을 애탠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박석운(54)씨는 "실종 소식을 듣기 전까지 (행수가) 히말리아에 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부모가 걱정할까봐 누나한테만 말을 하고 떠났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대원은 지난 2008년 5월께 히말리아 등반에 다녀온 뒤 양쪽 발에 심한 통증이 걸려 발가락을 모두 자를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간 뒤에도 등산용품 매장에서 일할 만큼 산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박 대원은 지난 24일 '한국도로공사 마나슬루 원정대' 대원 4명과 함께 마나슬루 정상(8163m)을 향하다 해발 8000m 지점에서 운치원(42·영원무역)씨와 함께 실종됐다.



지난 24일 히말리아 원정 등반 중 실종된 박행수 대원의 부모가 아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현지 수색을 하던 헬기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 사진촬영을 했으나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경찰, 유흥업소 단속 소홀 이유 있었다

직무 평가 강도 검거 '50점'

유흥업소 업주 단속은 '1점'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성매매 등 범태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여전히 상업 중이다.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쟁는 이를 바보방도 할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관의 직무성과 평가 점수가 유혹주점이나 보도방 단속은 강력범죄에 비해 미미한 반면,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근형사 직무 평가(IPAS)에서 5대 강력범죄 중 살인과 강도·방화의 평가 점수는 각각 50점과 30점이다. 강간·절도는 20점이다.

그러나 보도방·유흥업소 업주 검거에 따른 점수는 1명당 1점에 불과하다. 유흥주점·보도방 관련 사건이 청소년 탈선과 성범죄 유발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 이 높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경찰이 잘 거들떠보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은 서로 은밀한 연락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특성상 검거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더라도 수십 명에 달하는 도우미와 보도방 업주, 유흥업소 주인 등을 불러 일일이 조사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그지 없다.

일부 기감이 해이해진 경찰은 이처럼 '재미없는' 사건에 매달리기보다는 거꾸로 업자와 유흥관계를 형성했다가 종종 사법처리되고 있다. 경찰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적발됐을 땐 돈을 받고 무마해 주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 지역 한 경찰관은 "시간 만 낭비하는 불법 유흥업소와 보도방 업주를 단속하려고 달려드는 무모한 직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6일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도방 및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을 기소하고, 업주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 1명을 구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귀가여성 돈 빼앗은 2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7일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기모(25)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이날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모(여·40)씨의 현금 51만원과 휴대전화 등 15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요금독촉에 버스 가로막고 소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요금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버스 운행을 방해한 40대 취객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염모(48·화순군 능주면)씨는 지난 26일 밤 10시5분께 광주시 동구 지원동 소태역 버스정류장에서 김모(55)씨가 운전하는 15번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손님을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경찰 조사결과 솔에 취해 버스 카드를 찾지 못한 채 버스정류장 4개를 그냥 지나친 염씨에게 운전기사 김씨가 "내리든지 돈을 내든지 하라"고 요구하자 버스운행을 방해했다는 것.

○…염씨는 경찰에 "손님은 왕이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고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전운동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준비사무소 압수수색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준비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완준 화순군수 사전 영장

유권자에 향을 제공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7일 관사에서 유권자에게 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 군수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께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간부 등 23명을 관사에 초청해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4000원 상당의 향을 제공했다.

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었

다.

그러나 전 군수는 "당내 선거를 앞두고 출마 자지를 노리는 일부 세력의 고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군수의 관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 34만8000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전 군수의 선거 참모 오모(63)씨를 구속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7급 9급 공무원 / 경찰직

협력 전문학원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 교육행정직 9급·10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전남시·군 기관 협력직 7급·9급 실무자 100% 합격률